

통일부,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」 전체회의 개최

- 38개 관계기관 참여,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」 심의·의결
- ‘북향민’ 용어 사용 등 인식개선 제고, 고위험군 지표개발 등 위기관리에 중점

□ 통일부는 3월 26일(목) 오후,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」(위원장: 김남중 통일부 차관)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」을 심의·의결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, 2024년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.

*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」 참여 기관(38) : 교육부·외교부·통일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성평등가족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·기획예산처·국가안보실·국가정보원·국무조정실·경찰청·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

□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」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착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으며, 올해도 교육부·노동부·복지부·성평등부 등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.

○ 2026년 시행계획은 「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(24~26)」을 토대로 교육·일자리·인식개선·위기관리 등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. (붙임 참조)

○ 먼저, 이번 시행계획은 북향민 인식 개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-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‘북향민’ 용어 사용을 확산해 나가고,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서 북향민 용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.

- 또한, 남북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, 「북한이탈주민의 날」 행사 등을 계기로 북향민과 일반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 기회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.

- 또한, 북향민 자립·자활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.

- 북향민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. 특히,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.

- 고위험군 북향민을 보다 더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, 경제적 지표 이외 비경제적 지표(예) 사회적 고립도 등)를 포함한 고위험군 지표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상반기에는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(기존 3개 → 4개)하여, 경기 남부 및 충남 지역 거주 북향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“각 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북향민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정착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,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”며, 각 분야별로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.

- 정부는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귀담아 듣는 한편,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북향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.

붙임 : 1.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」 과제 현황
 2.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」 전자파일(별첨)

담당 부서	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	책임자	과 장	권동혁 (02-2100-59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성환 (02-2100-5921)



【 추진과제 현황 】

6대 전략	25개 정책과제 및 45개 세부과제
<p>1. 북향민을 포용,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</p>	<p>1-1 북향민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① 북향민 명칭 사용 ② 북향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 ③ 「북한이탈주민의 날」 기념 및 포용적 문화 조성 ④ 남북통합문화 진흥 등 북향민 인식 개선 노력</p> <p>1-2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⑤ 민주평통·이북5도위원회 멘토링 활성화</p> <p>1-3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⑥ 북향민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북향민 단체 역할·역량 강화</p> <p>1-4 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⑦ 통일·대북정책 참여 통로 확장</p>
<p>2.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</p>	<p>2-1 북향민 보호원칙 강화 ① 북향민 보호 내실화 ② 거주지 신변보호 체계 합리화 ③ 북향민 인권보호관 제도 내실화 ④ 북향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</p> <p>2-2 해외체류 북향민 보호체계 강화 ⑤ 해외체류 북향민 보호체계 강화</p> <p>2-3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⑥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</p> <p>2-4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 ⑦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</p>
<p>3.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</p>	<p>3-1 제3국 출생 등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① 북향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확대</p> <p>3-2 모성 보호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②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양육·보육 지원 강화</p> <p>3-3 정규학교 적응 지원 ③ 입국 초기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④ 일반학교 적응력 제고 지원 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⑥ 고등교육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</p> <p>3-4 특성화·대안학교 교육 지원/환경 개선 ⑦ 대안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</p> <p>3-5 미래세대 잠재 역량 강화 ⑧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</p> <p>3-6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⑨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</p>

6대 전략	25개 정책과제 및 45개 세부과제
4.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지활 촉진	4-1 공공부문 및 전문직 진출 확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부-지자체-공공기관 북향민 채용 확대 ② 전문직 양성 확대
	4-2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재북 경력 활용도 제고 ④ 취업지원 ⑤ 소상공인 등 창업지원 ⑥ 영농정착 지원 ⑦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직업훈련 강화
	4-3 채용 유인체계 마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⑧ 북향민 채용문화 확산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마련 	
4-4 장기근속 유도 환경 조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 북향민 일자리 적응력 제고 ⑩ 자산형성제도(미래행복통장) 운영 	
5.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	5-1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기 북향민 신속 발굴 및 종합·원스톱 지원 ② 자살예방 대책 강화 ③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④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⑤ 생활 속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
	5-2 북향민 새 출발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⑥ 북향민 새 출발 지원 	
5-3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·운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⑦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·운영 	
6. 북향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	6-1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체계 강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착지원협의회 내실화 ② 공공부문 북향민 정착지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
	6-2 지자체 북향민 정착지원 책무 및 역할 강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지자체의 북향민 정착지원 정책 연계성 강화
	6-3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④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	
6-4 북향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북향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	